

HACCP, 식품안전 확보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합니다

글_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윤희주 과장

2011년 11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의 식품안전정책을 담은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2012~2014)」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이 계획은 식품안전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으며, 특히 식품안전강화 대책 중 하나로 2014년까지 업체 기준으로 일반 식품의 20%까지 HACCP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 및 HACCP 현황이 어떠한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HACCP 현황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체제로 인정받고 있는 HACCP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5년이다. 그 당시 국내 식품산업의 수준은 업체의 영세성으로 재정 및 기술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나, WTO 가입 및 CODEX의 권고 등 국제적 추세에 따라 HACCP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식품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식품산업 총생산 규모도 증가하는 반면, 그만큼 위험에 대한 노출도 확대되어 그간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불량만두소, 김치 기생충알, 멜라민 함유 사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 증폭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최근 주요 선진국은 사전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및 식품사고의 국제적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인프라 및 예산·인력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영세업체 중심의 식품산업 구조에 따른 기본적인 위생시설 및 안전 인프라 낙후로 위반사례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

HACCP이 도입된 초기(90년대)에는 지정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적용업체를 확대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 HACCP지원사업단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HACCP 지정업체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09년부터는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현재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약11%가





HACCP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용 3, 4단계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대부분(80% 이상)이 매출액 5억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여전히 시설 개·보수 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HACCP에 대한 인식 부족, 전담 인력 및 조직 미흡 등이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향후 HACCP 정책방향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HACCP 시설개선 자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어묵류 등 7개 의무적용 품목 생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자율품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설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HACCP지원사업단 인력이 전국의 대상업체를 지도하고 있으나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 기술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ACCP제도 활성화는 식품안전을 확보하여 식중독 등 각종 식품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속 유지될 것이며, 더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업체 스스로도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HACCP적용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여기에 더하여 대국민 인식이 개선된다면 업체에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 여론 및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업계 스스로 적용의지를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정부에서도 최대한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7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HACCP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린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이나 생산, 소비량이 많은 제품의 경우 좀 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정부 정책방향도 이에 발맞춰 사전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